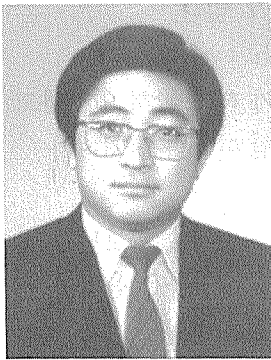




#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



李昌載  
〈쌍용정유 업무1 과장〉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현 처지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최근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다투어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최소한 이런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피력해 본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주장이 있기에 소개해 본다. 임원택교수(전 서울대교수.

학문은 언어의 정교함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학문과 지식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문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온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다. -나는 이 주장을 100% 수용할 뿐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한문공부를 일찍부터 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문습득시 어려서부터 단어의 개념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되어 지능도 발달하고 자립심도 길러질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뒤쳐진 이유는 기술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부족에 있다.』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첫째, 국가경쟁력 향상은 원천적으로 기술만을 부르짖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원인분석이다. 학문적 기초가 취약하고 관련분야의 수준이 미미한데 제조기술분야만 발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분야의 학문 발달과 함께 기술은 부수적으로 따라 올라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어디에서든 학문이 꽃을 피우지 않고 기술만 발달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선진국이 되려면 제조기술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부문의 발달이 필요한데 인문사회계통의 학문발달없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학문발달을 통하여 지식과 사고의 깊이를 끊임없이 누적해 나갈 때 제조기술도 소프트웨어의 발달도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학문의 부족이 근본적 문제가 된다면 처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는 기술연구소 건설 등 프로젝트별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문의 발달을 위해서는 바로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학문수준은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수 없는 지경이다. (현재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은 외국의 커리큘럼을 모방한 것임). 이제 대학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학문하는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학문에 매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울좋은 교권만을 내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학생에 의한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이 없는 교수들을 도태시켜야 한다. 또한 기부금입학제를 당장 도입하여 학문을 위한 재원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 자체의 인식으로부터 출발되기에는 요원하므로 오히려 경쟁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산업계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문의 발달 다음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시장의 개방화라고 감히 생각한다. 쇠국주의는 가장 나쁜 정책이다. 구한말의 쇠국주의는 나라를 잃게 하였으며, 오늘까지도 선진대열에 올라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결국 개방의 시기차이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엉망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쇠국주의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형편없던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은 2만달러가 넘는 부자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오직 열려진 곳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주체들의 자생력이 배양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도태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식민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독점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협박논리인 것이다. 보호의 논리는 끝이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온실에 가두는 틀을 범하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나, 부존자원의 부족측면으로나, 시장의 규모측면에서나, 경제발전 단계측면에서나 개방을 배제할 명분이 없다. 쇠국주의가 나쁜 것이라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도 나쁜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석유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석유산업이 타산업과는 달리 에너지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언제까지 예외일 수도 없는 것이다. 거리에서 외국메이저들의 폴사인이 붙은 주유소를 보게 된다고 해서 큰 일이 나지는 않는다. 경쟁의 격이 달라질 뿐이다.

각설하여 현 석유정책중 구조적인 사유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직시해 보기로 하겠다. 구조적이라 함은 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곤란하도록 오래동안 관례화되어 있거나 여러 조직이 함께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서 해결되지 않고 등등 떠있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석유제품 최고 판매가격고시의 관례화이다. 석유사업법 제15조에는 최고판매가격 고시요건을

「부당하게 앙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고가격고시는 분명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15년 이상을 관례적으로 계속 최고가격고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법상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 법문구를 고치던지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유종간 가격구조의 왜곡문제이다. 본래 유종별 세전공장도 가격구조는 유종별 국제가격구조에 접근시켜(수출입자유화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고 유종별 최종소비자 가격구조는 소비절약 및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종별로 소비세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종별 최종소비자가격구조의 변경을 위해서는 유종별 소비세율의 변경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재무부 소관사항이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므로 결국 세전공장도 가격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유종별 최종소비자 가격구조를 변경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전공장도 가격구조가 국제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유통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 관련부처와의 공동노력으로 유종별 특수세율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던지 석유사업기금제도를 개편하여 판매량을 기준으로 기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셋째, 점진적 규제완화의 폐단이다. 주유소허가기준중 거리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예: 1km→700m→350m)되어 옴으로써 주유소가 1km, 700m, 350m 마다 들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주유소거리기준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을 주유소가업권(premium)을 얻기 위해 기준거리마다 생기고 진정 필요한 지역에는 주유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주유소간 거리기준의 점진적 완화보다는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자유로이 건설하게 하되 밀집·과당 경쟁지역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는 하루 빨리 학문의 발달과 시장개방화를 서둘러야겠다는 확신에서 감히 붓을 들었으며, 업무상 13년간 석유정책을 대하면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